다산포럼

김민환

정파성 초극한 시민운동이 그립다

워커(Jack L. Walker)라는 정치학자는 미국에서 이익집단이 부상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1991년에 'Mobilizing Interest Groups in America'라는 책을 낸 바 있다. 이 책은 미국의 예를 분석한 것이지만 다른 나라의 이익집단을 이해하는데도 유용한 틀을 시사한다. 그에 따르면 이익집단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유형은 해당 집단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집단이다. 전국 자동차제조업협회와 같은 단체가 그 전형적인 예다. 이 단체는 전적으로 자동차제조업자의 입 노릇을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런 단체는 많다. 상공회의소나 경제인연합회 등도 이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둘째는 전문 직업인들에게 강력한 호소력을 갖는 비영리집단이다. 워커는 그 대표적인 단체로 전국약물남용방지협회를 들었다. 이 단체는 보건관련 전문인들이 주도하는데 이름대로 약물 오남용 방지운동을 벌인다. 구성 요소나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나라의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 범주에 속할 것이다. 이 단체는 전 현직 언론인과 언론단체가 폭넓게 참여하여 언론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다.

셋째는 민권이나 환경, 소비자문제 등 집합적 이해관계에 관심을 갖는 시민지향적 집단이다. 이 집단은 직업적 상업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상(理想)이나 대의(大義)를 추구한다. 워커는 그 대표적인 예로 행정개혁을 목표로 조직된 커먼코즈(Common Cause)나, 공기 문제에 집중적인 관심을 쏟는 깨끗한 공기를 위한 시민모임(Citizens for Clean Air)을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범주에 속하는 시민단체가 많다. 참여연대나 환경운동연합은 역사도 오래되었지만 사회적 영향력도 여전히 막강하다.

워커는 이들 세 유형의 단체 가운데서도 특히 세 번째 유형, 즉 시민지향적 집단에 주목했다. 그는 이 유형의 집단이 영향력을 키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때문에 사회의 공동선을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에 들어 각종 시민단체가 나타나 다양하고도 활발한 운동을 벌였다. 특히 괄목할만한 것이 시민지향적 시민운동이었다. 민주화라는 거대목표가 달성되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매몰되고 사회의 공동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게 마련인 시점에서 그런 시민단체가 대두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권력을 정치권이 독점하지 않고 시민세력이 조금이나마 분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시적인 과실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90년대 이래 우리나라에서 시민지향적 시민단체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한 힘의 바탕은 무엇이었을까? 외형적이나마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이 모여 낙천 낙선운동을 벌일 때도 그 단체들이 나름대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위법성 논란마저 억누르고 일정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그런 성격은 이제 옛이야기일 뿐이다. 2000년대에 들어 시민단체는 급격하게 정치화했다. 시민운동 자체가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발판이 되었다. 거물급은 정치권으로, 중견은 수많은 관변단체로 진출했다. 2000년대 초 중반에 진보주의 시민단체 출신들이 그렇게 '출세'를 했다면 후반기 이후에는 보수주의 시민운동가들이 온몸으로 진보주의자들과 맞서며 정계나 관변에서 그야말로 군웅할거하고 있다. 어떤 부류는 마치 자유당 시절의 백골단이나 땃벌떼를 연상하게도 한다. 그렇고 그런 과정을 거쳐 시민운동은 무서운 속도로 쇠락하고 있다. 정파성을 초극한 새로운 시민운동을 보고 싶다.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조영택

내년 나라살림 걱정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 3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가 내년에는 4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2년 만에 100조원의 나라 빚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 한 사람당 833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도 지난 10년간 30.6%로 OECD 회원국 평균(12.6%)보다 2.5배나 높다.

그럼에도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억지주장을 펴는 것을 보고 있자니,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장으로 나라살림을 해봤던 필자로선 절로 한숨이 나올 뿐이다.

앞으로 전망은 더 어둡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의 국가채무는 526조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작년 말 현재 '사실상' 국가채무가 1천439조원으로 사상 최대라고 밝혀 국가채무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주 민주당 정책위에서 국가채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국가채무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논의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작년 말 현재 309조원이지만, 이는 순수하게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일 뿐이다. 여기에 정부가 투자한 공공기관 채무(291조원)와 한국은행 및 국책은행 채무(477조원),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745조원)을 합친 '최종적으로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국가채무'는 1천822조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원인은 첫째 '부자감세'에 있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양도세, 상속·증여세를 인하했다. 그 결과 임기 5년 동안 90조원에 달하는 세입의 감소를 초래했다.

다음으로 4대강 사업과 같은 무리한 토목공사가 원인이다. 4대강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국책사업의 국고부담액이 140조원에 달한다. 연간 7천억원 규모이던 수질개선과 재해대책사업을 4대강 정비란 이름으로 30배 이상 부풀린 23조원을 쏟아부으려 하고 있다. 오죽 급했으면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공사부터 시작하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부자감세'에 따른 세입감소로 인해 결식아동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비정규직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장애인저상버스 도입, 결식아동급식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보 등 복지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중소기업·일자리·교육·환경 등 민생예산 역시 삭감됐다. 교육예산은 금년(39조2천억원)보다 3.6% 줄어든 37조8천억원이고 환경예산은 5.3%(5조7천억원→5조4천억원), 일자리예산은 25.5%(4조7천억원→3조5천억원) 감소했다.

국가 대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은 막아야 한다. 반면, 복지와 환경·교육·일자리 분야 예산은 늘려야 한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국민의 뜻이라고 확신하기에 더 큰 책임을 느낀다. 〈국회의원〉

기고

김환규

지구온난화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

얼마 전 모방송사에서 창사특집으로 '북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여 많은 시청자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지구온난화의 문제가 머나먼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를 마련했다.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삶의 기반을 잃어가는 이누이트들과 굶주린 곰들의 처절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빙하가 다 녹으면 지구는 없다'는 말을 새삼 떠올리기도 했을 것이라고 본다.

필자도 승용차와 가정에서 한 달 동안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계산해보니 무려 500㎏을 훌쩍 넘어서서 깜짝 놀랐으며, 더욱 놀라운 것은 자동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내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4% 줄이는 것으로 목표치를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실천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광주시도 18일에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 최종 보고회'를 갖고 오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70만7천톤을 감축키로 하고 1천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 생태숲 조성, 수목원 등 탄소를 줄일 녹지를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지구환경파괴에 대한 관심이 낮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1인당 에너지 소비는 세계 5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10위, OECD국가중 배출증가율 1위, 지난 40년간 제주도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지구 평균의 3배에 달한다는 것은 참으로 심각한 일이다.

세계적 항공사진작가 얀 아르튀스 베르트랑은 영화 '홈(HOME)'을 통해 지구는 잠시 빌려 쓰는 집이 아니라 66억 명의 인류, 동식물, 미래의 자손들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인천에서 열린 '세계환경포럼'에 참석해 '한국에는 말로만 그린(green)을 강조하지 실제로는 그린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한 것 같다. 그만큼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미래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한 구심점이 되기 위해 2008년 2월에 출범한 기후변화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우리 광주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환경이 무척 깨끗한 편이다. 특히 1천만 그루 나무심기운동을 통해 숲이 우거지고 광산업, 전자산업 등 굴뚝 없는 친환경 산업을 주력산업으로 지역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해왔다.

이제 날씨가 더 추워지면 각 가정과 사무실에서는 난방온도를 높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증가할 것이다. 올 겨울에는 집과 사무실의 난방온도를 낮추고 대신에 내복을 입으면 어떨까? 피부건강에도 좋고, 난방비도 절약해서 좋고, 게다가 환경까지 지킬 수 있으니 1석3조가 아닐런지.

지금 세계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하여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환경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척도가 될 날이 머지 않았으며 우리 광주도 그 대열에 이미 함께 하고 있다. 한사람 한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생활화할 때 우리 광주가 진정 환경 1등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경영학박사·전 북구 부구청장〉

사설

석면 검출된 학교 건물 이대로 방치할 건가

광주·전남지역 학교 건물에서 석면이 대거 검출됐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나 학생들을 석면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박흥수 의원은 7일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도내 초·중·고교 842개교 4만416개 교실 가운데 95.7%인 806개교 3만1천161개 교실이 석면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에는 전국 3천158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가운데 99.1%인 3천128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조사 대상 학교 33개교에서 모두 석면이 검출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을 석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찾아보기 힘들다. 내년 예산안에 석면 피해를 줄이기 위한 건축물의 개보수 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석면 사용과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한 것이 고작이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잠복기가 10~40년으로 길어 '소리없는 살인자'로 불린다. 폐에 흡입되면 흉막질환이나 폐암, 악성중피종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싼 가격에 단열효과가 뛰어난 석면은 1970~80년대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됐다. 학교 건물 외에도 아직도 석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전국 일부 염전의 창고 등이 석면 슬레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왔다.

차제에 보다 체계적인 석면 관리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석면이 사용된 시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 석면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대기 오염을 심화시킨다. 석면 건축물 철거를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나 개인에게 맡겨둘 수 없는 이유다.

태안 기름유출 2년 아물지 않은 상처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가 2년이 됐지만 전남지역 피해주민들에 대한 배상은 지지부진하다고 한다. 2007년 12월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국내 사상 최악의 기름유출 사고로 전남 서해안 주민들은 생계 터전을 잃은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껏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바다는 빠르게 제 모습을 회복하고 있지만 피해주민들의 삶은 재앙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된 전남지역의 피해는 영광, 무안, 함평, 신안, 진도 등 5개 군에 걸친 해안선 113.3㎞와 양식장 1만9천17㏊의 광활한 지역이 초토화됐다. 접수된 피해건수만도 3만2천49건에 이른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보상은 김 양식어민에게만 한정됐다. 그나마 김 양식 어민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규모는 247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국제기름 오염 보상기금(IOPC Fund)이 선정해 통보한 금액은 81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맨손 어업 등 기타 수산분야는 피해를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보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2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주민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보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IOPC Fund를 통한 보상은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을 요구해 피해어민들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를 일으킨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이 사고 이후에도 별다른 통제 없이 계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기름유출 사고 후부터 지난 9월까지 2년 동안 모두 313척의 단일선체 유조선이 남해를 운항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단일선체의 운항을 즉각 금지해 '제2의 태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몰디브

1천300여 개의 작은 산호섬. 섬들 주변에 포도 송이나 고리 모양의 환초(環礁)를 이룬 절경의 모래톱이 환상적이다. 최근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진 몰디브는 인도양의 아름다운 나라다.

옹기종기 모여 사는 40만여 명의 몰디브 사람들은 최근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지구온난화로 수몰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10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에 직면한 몰디브 정부 장관들은 해저 국무회의를 열었다. 선진국들이 내뿜은 온실가스 때문에 몰디브처럼 개발도 해보지 못하고 위기에 빠진 나라들의 억울함을 표시하기 위해서다.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막된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지난 4일 에베레스트산 베이스캠프에서도 항의성 회의가 열렸다. 네팔 정부 각료들이 산소마스크를 쓴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 사람들은 지난 2001년 수도가 수몰된 이후 뉴질랜드로 탈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가까운 중국 상하이 일부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 향후 수십 년 후 바다에 잠길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루젠젠(陸健健) 중국 화동사범대 교수는 코펜하겐 회의에 앞서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이를 예견했다. 그는 평균 해발 3~5m로 중국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상하이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 때문에 현재 상태로 가면 2050년 해안지역 상당 부분이 바닷물 속으로 잠길 것으로 전망했다.

코펜하겐 회의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모든 나라가 노력해 지구촌을 지켜야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개발과 직결된 온실가스 배출 목표량 감축에 쉽사리 동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소홀히 했다가는 언제라도 몰디브나 투발루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박치경 정치부장 unipark@kwangju.co.kr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절대 하지말자

미국 보험사에서 재해 관련 사건 5천 건을 분석해 본 결과, 대형사고 1건이 발생하기 전에 같은 요인으로 비롯된 소형사고 29건이 있었고, 또 운 좋게 재난은 피했지만 같은 사고를 낼 뻔 한 크고 작은 사소한 징후가 300건이나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인리히 법칙이다.

하인리히 법칙은 기업의 부도, 산업재해뿐 아니라 아이들의 삐뚤어진 성장 등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까지 주변에 수없이 많은 신호를 보내지만 미리 대처해야 하는 관련자들이 무관심과 안이한 태도를 보여서 결국 일이 터지고야 만다는 진리를 말해준다.

눈과 얼음이 항상 도사리고, 연말연시 음주운전의 유혹이 늘 따라다니는 겨울철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통법규를 잘 지켜 광주 시민들이 대형사고로 인한 개인적 참사를 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수능 이후 수험생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마련했으면

수많은 재수생은 수능을 치르고 나면 자유스럽게 놀고 먹자판에 휩쓸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래서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탈선에 빠져들지 않도록 어른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앞으로 수험생에 따라 논술시험과 면접고사 등의 남은 절차가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이 이젠 학교 생활도 느슨해져 곳곳에 널려있는 탈선의 유혹에 빠져든다. 교육 당국은 수능 이후 수험생들을 위해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주었으면 한다. 그저 교실에만 묶어두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하면 안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수능 이후의 수험생을 위한 건전 문화 체험이나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고 책임감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수능을 치른 청소년들 또한 수능은 하나의 과정이며 인생의 끝이 아닌 새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박미진·목포시 서산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 회 2 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00-521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41	체 육 팀	2200-663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1 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